

제9회
백년포럼

다른백년, 역사의 새가 되어

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관계

-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한 갈등과 중미 관계 -

발제: 진징이(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

- ▶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19:30~21:30
- ▶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1953년생, 연변대 중문학부,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졸업. 법학박사(국제정치). 일본 게이오대 지역연구소 객원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문연구원,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 역임.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한반도연구중심 상임 부주임 역임. 현재 베이징대 외국어학원 교수, 한반도문제포럼 주임. 중앙민족대 특임 교수, 중한교류협회 이사, 중국아세아아프리카발전교류협회 이사.

저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등 다수.

【발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한 갈등과 중미 관계

진 정 이*

수 년 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한 양국 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강행된 후 일주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중한 양국은 사드논쟁으로 돌아올랐다. 한미가 7월 8일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한 양국은 본격적인 사드정국에 들어섰다. 양국관계는 수교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동안 사드문제에 대한 중한 양국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중국 역시 사드 배치를 견지하는 한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사드문제를 논하고 있다. 국가안전은 한 나라에 있어서 기본이익이다. 국가안전이란 무엇보다 먼저 국가를 위협이 없는 객관상태 즉 외부의 위협이나 침해 또는 내부의 혼란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한다. 자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당연하다 하겠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이익을 위협한다고 한다. 역시 자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사드문제가 논쟁을 빚으면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자국의 안전을 타국의 불안전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한중 양국의 이 갈등은 두 나라의 핵심이익에 관련되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미국 요소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에 있어서 사드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중미의 힘겨루기와 사드를 둘러싼 중한관계를 다루며 사드정국의 해법을 모색해보려 한다.

* 金景一,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과 중국

한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첫째는 사드의 미사일방어기능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사드를 보았을 때 현재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미사일요격체계인 PAC-3은 단거리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요격할 수 없다. 사드가 필요한 원인이다. 그렇지만 사드로는 한국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자 한국 인구의 근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한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지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드는 북한이 현재 사활을 걸고 개발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사드는 분명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라 본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 줄곧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고 종당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있다. 북한의 갈수록 커지는 핵미사일위협에서 한국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밖에 없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본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에 대한 압박 기능이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한 “제재일변도”로 돌아설 것을 바란다.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3차, 4차 핵실험은 중미, 중한 관계에 계속 파장을 몰고 왔으며 중국은 계속 주요한 타깃이 되어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비록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찬성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냉전이 종식된 후 가장 엄중한 냉각기를 겪었지만 한미일은 여전히 중국에 압력을 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바랐다. 그 영향력이란 다음 아닌 북한에 대해 보다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북핵 해결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북핵문제 해결의 앞으로 떠미는 형국이 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첫째는 역시 사드 본연의 미사일방어능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한 미군과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기능이라 하겠다. 실제 사드를 성주 부근에 배치함으로써 오산, 군산, 대구, 평택 등 대다수 미군기지가 방어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셋째는 사드의 다른 한 기능이다. 바로 사드 레이더의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기능이다. 유사시 사드의 기능을 확장하여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전세계에 미사일방어(MD·엠디)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은 괌~오키나와~한국을 잇는 엠디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을 엠디에 편입시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묶으려 하는 것이다.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은 한국의 세번째와 미국의 세번째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사드의 의미

첫째로 중국은 사드가 한미가 강조하는 북한의 미사일방어 목적 외에 미국에 있어서는 위의 세번째 기능,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괌-오키나와-한국으로 이어지는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된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 힘입어 한미일의 동맹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아시아판 나토의 출현까지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일환으로서 사드문제는 결국 중미문제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미중갈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둘째로, 한국은 이 사드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가 종말단계 레이더로서 반경 600km만 탐지, 추적하기에 중국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드의 레이더 기능은 미국 본토의 MD계통과 연동하여 중국의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화북, 화동, 황해, 동해 지역의

까지의 미사일발사가 모두 미국의 감시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사드의 통제권은 미국에 있고 사드 기능의 업그레이드 역시 미국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고 보며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사드를 동북아의 판도라상자로 보고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동북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수십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본다. 사드가 배치되면 러시아도 극동지역에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역시 중국에 대한 사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 필요한 군사적 방어를 진행할 것이다. 사드문제로 한반도가 또다시 극동지역의 화약고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일한 해결 방안도,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 한반도 평화, 역내 불균형, 특히 각 분야의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는 것이다.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중미의 힘겨루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표시하였다. 즉 사드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충돌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올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튿날 미 국무장관 케리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했으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더는 과거의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른바 “중국책임론”을 펼친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여 “미국책임론”을 펼쳤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핵문제의 유래와 매듭은 중국에 있지 않으며 문제 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북핵문제의 발단은 북미갈등에 있고 갈등의 주요 일방은 미국이라는 논리로 반론을 펼쳤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원이 북한과 미국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백히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오바마의 두 차례 임기동안 미국은 이른바 “인내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에서 손을 놓고 있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는 두 전략적 지주를 강화하여 상호 지지하는 삼각체계를 이룸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전략적 지탱점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중미간의 책임론공방은 한미가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사드정국으로 이어졌다. 사드는 바로 북미간에 벌어진 북핵게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제기했듯이 북핵문제는 그 발단이 북미갈등에 있다. 북한은 일찍이 동서냉전의 종식에 앞서 “대치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미국과 화해 공존할 것”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했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북미 고위급 회의, 북일 국교 정상화 담판, 남북의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이 잇따랐고 남과 북의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냉전시기의 “북방삼각”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북한 대 한미일의 냉전구도를 탈피하려 한 것이다.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북한에 통보했을 때도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가 미묘한 시기에 처해 있기에 중국이 중한관계와 북미관계를 조화하여 고려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교차승인을 바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나라를 견제하려는 미국에는 한반도냉전구도가 필요하였다. 북미는 하나는 냉전구도를 탈피하려 하고 하나는 유지하려 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빚기 시작하였다. 매개는 북핵이었다. 미국은 북핵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여왔다. 북한은 북핵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려 하였다. 북미간에 벌어진 북핵게임은 결과적으로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북핵을 컨트롤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전례없이 강화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아시아재균형전략”을 펼쳐왔다.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탄도미사일발사를 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 사면초가의 고립을 자초하였다. 결국 북핵게임의 승자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핵이라는 방울은 미국이 달았고 북핵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안보

우려 해소”를 모두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전략적 시각에서 미국이 북한의 세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경우 동아시아에는 미국이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일동맹, 주일미군의 존재를 입증해줄 수 있는“적대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 시각에서 북한의 “붕괴”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모두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같은 개념일 수 있다. 결국 북핵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자기전략에 편입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드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임은 틀림없다. 사드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뿐이고 남북 대결의 산물이라면 중국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사드는, 미국이 북핵을 컨트롤하며 전개해온 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근대사 이후 동북아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갈등이 한반도에서의 충돌과 전쟁을 불러왔다면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갈등 역시 북핵과 사드문제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갈등의 실질

지난해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우방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안문 성루에 올랐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언론에 세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조속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한중 정상이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것, 마지막은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조속한 시일안에 중국측과 다방면의 토론을 진행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중국의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남북관계와 한반도통일문제에서 중한양국이 치중하는 중점과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하겠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회의에서 “내년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놓기 한 달 전 당시 한국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은 송년회에서 “2015년에 대한민국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장성택처형사건이 벌어지자 금방 나왔다. 그것은 많은

부분 북한정권의 급변사태나 붕괴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북한붕괴를 점찍은 것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2014년 외교백서”에서 장성택처형 후 김정은정권의 내부갈등 조정능력 저하와 빈번한 간부물갈이 등이 정권 내부의 동요를 조성하였고, 권력 내부의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차원의 체제불안정 상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정권의 공포정치는 정권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공포정치는 단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의 불안정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둘째,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여 북한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인식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중북관계가 냉각상태에 처하자 한국에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인식이 퍼졌다.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까닭은 중국이 북한을 받쳐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정부와 같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났기에 효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고 인식하였다.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특히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고 할 수 있다. 북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바라는 중국의 역할이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설득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조치, 결정적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조치를 취하기 바랐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말의 강거목장(綱舉目張)(머리를 집어올리면 그물코가 절로 퍼진다) 뜻대로인 것이다.

결국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가장 바랐던 것은 중국이 한국이 바라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어떤 한국학자들은 시진핑이 말한 “자주평화통일”은 통일이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식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한국주도의 통일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며 “만약 북한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시에는 중국 또한 그 정권의 붕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였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진핑과의 회담 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언론에 보낸 세가지 메시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조속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한중 정상이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것,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조속한 시일 안에 중국측과 다방면의 토론을 진행하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통일문제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았고 줄 수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연초 북한이 느닷없이 4차 핵실험을 하자 한국은 최상 관계의 중국이 ‘본격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북한을 질식시킬 정도의 제재를 바란 것이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 만에 한국의 기대는 ‘분노’에 가까우리만치 ‘실망’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1월 6일 핵실험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사드 체계 도입을 처음으로 거론하였다. 어디를 보아도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북핵정국이 금방 사드정국으로 바뀌면서 중국과 한국에는 사드논쟁이 불붙었다. 드디어 7월 8일 한·미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자 최상이라던 중한 양국 관계는 언제 그랬냐 싶게 급랭했다. 양국 신뢰의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사실 그동안 북핵 정국에서 남과 북에 균형정책을 펼쳐오던 중국의 추는 최근 수년간 한국에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중국과 한국 양국 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뀔 정도로 중-한 관계는 수교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한중 사드 논쟁의 핵심에는 북핵과 북한을 둘러싼 양자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북핵의 궁극적인 해결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힘을 실어줄 것을 바란 것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기대에 못 미치자 사드문제가 등장하였고 그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진 것이다. 중국은 평화·안정, 부전(不戰), 불란(不亂)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전쟁 불사’까지 거론하는 한국 일각에는 고리타분한 주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국 일각에서는 이를 북핵 용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북한을 감쌌기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도 한다. 그래서 사드가 불편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라고 한다. 결국 중국이 사드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과 함께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압박하여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사드정국의 해법

한국은 사드배치는 한국의 군사주권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드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동북아의 균형이 깨지고 수십년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 그것은 사드 문제가 사실상 사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초월하여 북핵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국제정치를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평화가 깨진 지난 역사를 보면 한반도는 늘 그 진원지이자 피해지로 되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자기들의 전략에 편입시키며 일어난 갈등과 충돌이 전쟁으로 치달았다. 사드배치는 결과적으로 중미간의 전략적 갈등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드문제는 중한이 안고 있는 갈등이지만 사태는 중한이 협상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가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철회를 바라는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중국은 미국과 한 달이 넘는 협상과 조절을 거쳐 미국이 내놓은 유엔안보리 제재안을 조절하였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안에 찬성하면서 제재안을 참답게 이행할 것임을 거듭 밝혀왔다. 표면상 이것은 중미가 북핵문제해결에서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 제재안에 찬성을 표하면서 다른 한 카드를 내놓았다. 바로 한반도비핵화와 정전협정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병진하여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작금의 세계에서 어떠한 이슈도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으며 군사적 수단은 더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므로 더더욱 취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중국이 내놓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핵문제의 근원이 바로 정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냉전구도에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표본겸치(标本兼治) 즉 표면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을 함께 치유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때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뿌리는 바로 한반도가 정전체제하의 냉전구도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체제와 구도가 있기에 강대국들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관계, 전략관계가 한반도에 집약되어 상호 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갈등과 충돌을 파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냉전구도가 존재하고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작금의

사드문제가 해소되면 다른 무엇이 사드를 대신하여 충돌의 매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갈등과 충돌의 근원인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정국의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지만 유일한 해법은 남북한의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는 노선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중심이 경제건설에 쏠린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시장경제 요소가 확장되고 있다. 북한이 보여주는 많은 변화는 바로 이 시장경제 요소의 확장에서 오는 연쇄반응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북한의 변화 역시 이 시장경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 시장경제 요소가 확장되면 될 수록 남북 간의 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해결에 앞서 경제 교류와 협력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건을 일례로 볼 때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가장 엄중한 반공, 반정부사건이다. 관례대로라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전국적으로 문화혁명과 같은 정치운동을 벌이고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중국이 없었을 것이다. 덩소평은 이를 경제로 풀었다. 바로 1992년의 남순강화로 모든 주의력을 다 개혁개방에 돌렸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가치관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가 확장되고 부가 창조되고 사유재산이 늘어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체제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시장경제의 확장은 바로 유일권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여기에 있다해야 할 것이다. 장원한 견지에서 볼 때 역시 사드정국의 해법이기도 할 것이다.